

일반
논문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전재호 _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참여했던 여러 세력 중 정치사회의 역할이 과소 평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던 김대중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국내의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및 대중 강연을 통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레이건 정부의 대한 정책을 비판했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활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 언론과 의원들이 레이건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레이건 정부의 대한정책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2월 귀국 후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 세력 모두의 연합을 통한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형성과 중산층 및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참여세력들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비용공, 비반미의 3비 원칙을 주장했다.

결국 김대중의 의도대로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세력이 국민

운동본부로 결집했고, 직선제 개헌 구호를 통해 중산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승리했다. 비록 정치사회의 분열로 인해 민주화 세력이 집권에 실패했을지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행에서 정치사회와 김대중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평가절하될 수 없다.

■ **주요어:** 민주화 이행, 민주화운동, 김대중, 레이건 정부, 정치사회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민주화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급진적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 세력, 제도적으로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정치사회의 야당과 재야 세력, 그리고 군부독재의 종식을 바라는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목표를 매개로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는 여러 세력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역할은 학생운동과 시민들에 비해 상당히 평가 절하되고 있다. 그 이유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정치인의 분열이 군부 권위주의 세력이 재집권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은 대선 패배와 민주화 이행에서 야당의 역할은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은 패배했지만 민주화 이행에서 그들의 역할은 공정히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야당의 역할을 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김대중을 선택하여, 그가 민주화 이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찰한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것들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접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역사적 접근, 그리고 양자를 결합한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행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표적 연구로는 첫째,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여 지배세력과 대항세력 모두 온건파의 타협에 의해 한국에서 민주화가 가능했다는 ‘전략적 선택 이론’(임혁백 1990), 둘째, 국가-사회 관계에서 정복국가와 저항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강력한 국가’와 ‘강력한 사회’가 동시 성장하면서 양자 간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으로 정치변동이 전개되었다는 사회운동론(성경룡 1995), 셋째, 초보적인 수준에서 조절이론적 시각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김호기 1995, 309-319)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개별 이론이 지닌 내재적 한계뿐 아니라 한국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현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손호철 1999).

다음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접근은 주로 1987년의 민주화 이행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인식한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 이 영역에 속한다. 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민주화운동사 3: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책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서술했을 뿐 아니라 종교계, 언론·출판계, 교

육계·학계, 문화예술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여성운동 등 사회 부문별 운동사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당시 민주화운동과 밀접히 관련되고 민주화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사회, 곧 재야와 야당,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이론적 시각과 역사적 접근을 결합시킨 연구들이 존재한다. 조연현(1997)은 민주화에 있어 민중의 주도적 역할과 민주화운동의 체제 변혁적 지향을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인식을 보여준 데 비해, 윤상철(1997)은 민주화에 있어 중간계급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양자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정해구·김혜진·정상호(2004)는 민주화 세력이 ‘최대 민주화연합’으로 결집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설명했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야당과 재야세력 등 정치사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인해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 권위주의 세력이 재집권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회는 민주화운동에서 학생운동이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의 결성과 1985년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의 부상은 직선제 개헌을 공론화 시켰고, 이는 중간계급을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상철(1997)과 강원택(2015)의 연구가 이러한 정치사회의 중요성을 잘 지적했다. 그리고 민주협을 다룬 김삼웅(2013)과 강원택(2015)의 연구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당시 정치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예를 들어 김대중을 다룬 출판물을 보면, 주로 자서전과 평전, 그리고 에세이일 뿐 학술적 연구는 드물다. 후자의 경우에도 주로 대통령 시기 통일정책이나 경제정책 또는 리더십을 분석했다. 그의 민주화 투쟁과 관련된 연구는 장신기(2013)의 연구가 유일한데, 그것은 김대중의 활동이 아닌 사고, 곧 민주화 이행 전략을 분석했다. 장신기는 김대중이 평화와 자주를 원칙으로 삼아, 야당과 재야의 연합을 운동 방법론으로, 그리고 선민주 후통일, 비폭력·비용공·비반미(非反美)의 3비(非)노선,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등을 민주화운동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결국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을 고찰한다. 왜냐하면 그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동시에, 민주화운동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1972년 총선 유세 지원 중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1980년대까지 가장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은 정치인이었다. 1973년 도쿄에서의 납치, 구속과 가택연금, 1980년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한 사형선고와 투옥, 미국 망명, 가택연금 등은 그를 한국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그는 국내외의 '양심 세력'으로부터 일종의 '상징적 권위' 또는 '지도력'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정치사회

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의 활동을 고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1980년대 김대중의 활동을 네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첫째, 1979년 10·26 이후의 정치활동과 1980년 5월 17일 검거 이후의 투옥 생활을 살펴본다. 둘째, 1982년 12월 도미 이후의 활동을 다룬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전혀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문서를 비판적으로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1985년 2월 8일 귀국 이후 1987년 6월항쟁 시기까지의 활동을 다룬다. 넷째로 1987년 6월항쟁 이후 12월 대통령 선거 시기까지의 활동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김대중의 역할을 평가한다.

2.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김대중

1) '서울의 봄' 시기와 제5공화국 초기(1979.11~1982.12)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하자, 가택 연금 중이던 김대중은 11월 10일 '시국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유신체제 희생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복권 단행, 민주정부 수립까지의 분명한 일정 발표, 거국적인 중립 내각과 범국민적 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12월 8일 긴급조치 9호 해제로 가택연금에서 풀리자,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의 합의 위에 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성취하고자"

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긴급조치 해제와 민주 인사들의 석방을 환영하고 그들의 복권과 기타 옥중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부 주도로 헌법개정안을 만들려 시도했고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 장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의 활동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공민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80년 1월 30일 김대중은 윤보선, 김영삼, 양일동 등과 함께 계엄 해제, 사면복권,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월 29일 사면 복권된 이후 그는 여러 모임과 대중강연에서 민주화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김영삼과의 경쟁을 벌였다. 그는 반유신 투쟁에 기여한 재야 민주인사들과 신민당이 통합하여 범야 단일 세력을 이룰 것을 요구했지만, 김영삼은 신민당이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결국 양자는 결별했다.

1980년 초 학원에서는 재적 학생 복교 및 해직 교수 복직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개강 직후부터 ‘학원 민주화’ 투쟁이 전개되었다. 5월 2일 서울대 ‘민주화대총회’를 시발로 각 대학에서 ‘민주화대행진’이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은 유신 세력 퇴진, 계엄 철폐, 이원집정부제 반대, 정부 주도 개헌 반대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대학생의 시위는 5월 15일 전국대학생계엄해제시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 신군부는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임하는 등 실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김대중은 5월 14일 글라이스틴(William H. Gleysteen) 주한

미 대사가 사태수습을 요청하자, 기자회견을 통해 과격 시위가 민주화 거부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으니 학생들이 시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야인사들에게도 강경한 내용 대신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신현확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도록 설득했다. 16 일에는 김영삼과 회동하여 계엄령 해제, 정치범 석방, 정치일정 연내 완결 등 시국 수습책 6개 항 실시를 촉구했다(김삼웅 2010a, 508~511).

그러나 신군부는 5월 18일 밤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운동 세력 등을 기습적으로 검거했다. 그런데 신군부는 김영삼에 대해서는 가택 연금시킨 데 비해, 김대중은 장남 홍일, 동생 대현 등 가족과 친인척을 비롯하여 문익환, 예춘호, 김녹영, 김상현, 이용희, 이문영, 장을병, 송건호, 리영희, 한승헌, 고은, 김종완, 김윤식, 김승훈, 함세웅, 한화갑, 김옥두 등 ‘김대중 계열’로 알려진 재야인사들 및 종교, 학계, 언론계 인사 26명과 함께 모두 중앙정보부로 연행했다(김삼웅 2010a, 517). 이후 신군부는 연행자들에게 온갖 고문을 가해 자신들이 날조한 범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했고, 결국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조작, 발표했다.

8월 14일부터 김대중은 24명의 동료와 함께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관을 받기 시작했고, 9월 17일 내란 음모와 반국가단체 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큰 발발을 일으켰다. 미국 정부는 ‘억지 혐의’라고 비난했고 에드먼드 머스키(Edmund Muskie) 미국 국무장관, 헬무트 콜(Helmut Koh) 독일 총리, 스즈키 젠코(鈴木 善幸)

일본 총리 등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전달했다(김삼웅 2010a, 547).

특히 미국은 김대중의 구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12월 6일 전두환과의 면담에서 “브라운 장관의 한국 방문을 전한 후 김대중의 사면을 정중히 요청하는 12월 1일 자 카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글라이스틴 1999, 261). 그리고 13일 브라운(Harold Brown) 미 국방장관은 전두환과의 회담에서 김대중의 처형이 장래 안보와 경제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김대중의 감형을 이끈 것은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와 국가안보 보좌관인 리처드 앨런(Richard Allen)이었다. 앨런은 전두환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특전사 사령관 정호용 소장에게 김대중을 죽이면 “벼락이 당신들을 치는 듯한” 미국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고, “한미 정부 사이의 거북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글라이스틴 1999, 263; 오버도퍼 2002, 216). 앨런은 레이건의 취임식에 전두환을 초청해 달라는 정호용의 요청에 대해 김대중의 대폭 감형을 조건으로 취임 후 방문을 허락했다(글라이스틴 1999, 264). 1981년 1월 23일 김대중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당일 국무회의는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전두환이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미국의 도움으로 감형된 김대중은 수감생활 중 정신적으로는 물론 고관절 통증과 이명 등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꾸준한 독서를 통해 지식과 식견을 넓혔다. 전두환 정권은 1982년 3월 12일 다시 그를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김대중의 수감이라는

부담스러운 짐을 덜기 위해 12월 16일 그를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시킨 다음, 23일 신병치료를 빌미로 미국으로 추방했다.

결국 유신체제 붕괴 이후 김대중은 민주화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신군부의 민주화 지연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내란음모사건으로 정치사회에서 강제적으로 축출되었다. 이후 재판과 투옥 생활을 통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1982년 12월 미국의 도움으로 수감생활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곧 1980년 이후 추방될 때까지 그는 민주화운동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2) 미국 망명 시기(1982.12~1985.1)

1982년 12월 23일 한국에서 추방된 김대중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언론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고,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한국 독재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한국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체류기간 내내 미국이 한국의 독재자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전달했다(김대중 2010, 426).

김대중은 25일부터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미국 내 기독교계 지도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관계

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1983년 1월 14일 슈스미스(Shoesmith) 미국 무부 부차관보와 오찬을 가졌고, 15일에는 문부식, 김현장 구명을 호소하는 대중 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 국민에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¹⁾

도미 직후 김대중이 강조한 주요 발언은 첫째, 자신은 강제 출국 당했고 신병치료 후 돌아가겠다. 사정이 허락하면 1년 내 귀국을 희망한다. 둘째, 대통령이 될 생각은 없으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해 싸울 것이다. 셋째, 한반도 전쟁 억지 위해 미군 주둔을 지지한다. 넷째, 미국과 일본이 서울의 억압적 통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를 바란다. 현 정권의 인권 억압은 박 정권 때보다 더하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를 석방하라, 다섯째, 한국 정부가 루머를 퍼뜨려 국민과의 자신 사이를 이간시켰다. 여섯째, 한국 정부가 한미일 관계에서 이득을 보느냐는 관건은 자신에게 달렸다 등이었다.²⁾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이 ‘반정부’ 활동을 전개하자, 그를 밀착 감시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 전개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1983년 1월 17일 외무부는 클리블랜드 주한 미 대리대사에게 미 국무성 산하의 ‘VOA (미국의 소리)’가 김대중의 재미 동정과 육성 방송을 방영한 것은 “한미관

1) 「김대중 도미 이후의 주요 언론 보도 경향(1983.1)」, 한국외교문서 70-18782, 136-176./ 「주미대사가 외무부장관에서 보낸 전문(1983.1.29)」, 한국외교문서 70-18782, 120.
 2) 「김대중 도미 이후 언론 동향 전망 및 대책 자료(1983.1.30)」, 한국외교문서 70-18782, 131-135.

계의 긴장을 조성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³⁾ 전두환 정권은 VOA가 한국에 대해 비판 성향의 보도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하락되고, 국내에서는 김대중 선전 효과를 초래하며 향후 종교단체, 학원 소요를 통해 보도 내용이 거론되면서 국내 비판세력을 자극할 것을 우려했다.⁴⁾

2월 15일 김대중은 미국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 상원의원의 환영 행사에서 “미국이 우리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다만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미국 정부가 안정과 안보라는 구실 아래 독재를 합리화하거나 고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김대중 2010, 426).⁵⁾ 또한 3월부터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예모리대 등에서 한국의 민주화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안보 우선 정책이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그는 3월 30일 예모리대 강연 후에는 카터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5월 16일에는 예모리대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5월 17일에는 NBC-TV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미국 내에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여 NBC 측의 방

3)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보낸 전문(1983.1.18.20:20)」, 한국외교문서 701-18782, 68.

4) 「미국의 소리 방송(VOA) 김대중 관련 내용 보도에 따른 문제점 검토(1983.1)」, 한국외교문서 701-18782, 85-90.

5) 「케네디 상원의원의 김대중 환영 파티(1983.2.16)」, 한국외교문서 701-18783, 41.

영 취소를 원했지만 실패했다.⁶⁾

김대중은 5월 18일 김영삼이 광주항쟁 3주년을 맞이하여 단식투쟁을 전개하자, 24일 연대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6월 4일에는 “김영삼을 구하라”는 팻말을 들고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및 국무부와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⁷⁾ 또한 뉴욕타임스에 “김영삼의 단식투쟁 (Kim’s Hunger Strike)”을 기고하고 단식투쟁을 지지했다. 또한 광복절에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양 김 공동명의로 “민주화 투쟁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양 김은 군사정권이 재창출된 데 대한 대국민 사죄와 함께 향후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천명했다(김대중 2010, 431-432).

김대중은 6월 워싱턴에서 한국의 민주화 열기를 미국 전역으로 퍼뜨리고, 이를 다시 한국에 보낼 의도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 운영과 소식지 발행 비용은 자신의 서예전 수익금, 강의료에서도 출현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민주화를 원하는 재미교포들의 지원으로 조달했다(김대중 2010, 429). 7월 26일에는 엘리엇 에이브럼스(Elliott Abrams)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와 한국의 인권문제 및 민주 회복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8월 2일 이범석 외무장관이 리처드 워커(Richard Walker)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국내외적으로 불필

6) 「NBC-TV의 김대중 초청 인터뷰(1983.5.23)」. 한국외교문서 701-18785, 68. / 「국제(1983.5.31)」 한국외교문서 701-18785, 261.

7) 「김영삼 단식 지지 테모(1983.6.6)」 한국외교문서 701-18785, 265.

요한 오해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미 정부에 신중과 자제를 요청”하는 등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⁸⁾

김대중은 8월 1일 뉴욕타임스 계열의 라디오 방송인 WQXR에 출연하여 전두환 정권 등장 이후 한국인의 대미감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 미국은 안보보다 민주화에 우선을 두어 우방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⁹⁾ 9월부터는 하버드 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1년간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도 계속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예일대, 매사추세츠 공대(MIT) 등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전망, 한일 관계, 옥중 생활의 경험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1983년 10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자, 김대중은 백악관 앞에서 레이건 방한 반대 시위를 전개했고, 10월 14일 김경원 주미대사, 솔라즈(Stephen Solarz) 하원의원과 함께 NBC-TV 투데이쇼(Today Show)에 출연하여 한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설명하고 레이건 방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¹⁰⁾ 그는 레이건의 방한이 한국의 독재 정권을 격려하고 인권 탄압을 용인하는 일이기예, 민주적인 한국인들을 실망시키고,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대중 2010, 439-441). 당시 미 의회의 많은 의원들도 레이건에게 인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한하면 독재 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방한하지 말

8) 「김대중의 국무성 관리 면담(1983.8.2)」 한국외교문서 701-18786, 26.

9) 「김대중 방송 내용 보고(1983.8.3)」 한국외교문서 701-18786, 53.

10) 「NBC-TV(1983.11.15)」 한국외교문서 701-18786, 234.

것을 요구했다(김대중 2010, 439).

물론 레이건은 한국을 방문했지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국의 민주화를 언급하고 전두환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다(Dunlop, 1998). 먼저, 전두환과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루었다. 또한 국회 연설에서 강력한 어조로 “지속적으로 정치체도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국민 전체가 합의하여 진정한 안보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전두환의 약속대로 1988년 자유선거 실시 공약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브라진스키 2011, 404~405). 그리고 11월 12일 주한 미대사관의 연회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최대 공헌이 국가안보라는 점을 지적한 후, 한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인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전재호 2014, 248-250).

이러한 미국의 민주화 요구 직후였던 1983년 12월 21일 전두환 정권은 학생사범을 포함한 공안 관련자 172명을 석방하고 142명의 공민권을 복권시키는 ‘유화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1984년 초부터 대학에 상주했던 경찰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로 인해 1984년부터 대학 내 학생운동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차례로 민주화 운동의 성장을 견인했다. 더욱이 “유화국면에서 민주화운동은 청년학생들과 재야세력을 넘어 사회운동세력과 야권까지 포괄하는 민주화의 연합운동으로 성장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33). 따라서 유화국면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절점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가 한국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는지는

확실히 않지만, 미국의 요구 이후 전두환 정권이 취한 유화조치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장을 가져왔다.

레이건 방한 이후에도 김대중은 계속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12월 20일 LA타임스에 기고하여, 방한 중 한국 정치 발전과 인권 존중에 대한 언급을 환영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조가 너무 약해 한국인의 소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점차 일고 있는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 정책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만일 미국이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군의 중립을 지키도록 한 후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주장을 공개 지지한다면 한국인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남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¹¹⁾

1984년에도 김대중은 미국 정계와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했고, 교포 사회의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해 강연 이외에도 출판 활동을 전개했다(김대중 2010, 443-444). 먼저 1월 1일 한국인권문제연구소 기관지 『행동하는 양심』 창간호를 발간하여 각계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민주회복과 민족통일을 우리의 과업으로 제시한 창간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좌담, 김대중 체류 1년간의 기록, 1983년 김대중의 연설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¹²⁾ 다음으로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투옥 시절 부인 이희호에게 보냈던 29통의 편지를 묶어 옥중서한집 『민족의 한을 안고』(갈릴리 문고)로 출간했

11) 「김대중의 LA 타임지 보도 내용(1983.12.22)」 한국외교문서 701-18786, 246-247.

12)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지 창간(1984.2.9)」 한국외교문서 701-18770, 35.

고 1월 8일 뉴욕, 28일 필라델피아, 4월 22일 LA, 5월 13일 시카고 등지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교포들과 모임을 가졌다.

한편 김대중은 1983년 후반부터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를 제시했는데, 그의 귀국 문제는 1985년 그가 귀환할 때까지 계속 전두환과 레이건 정부 모두에게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 우선, 1984년 2월 28일 미국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등 하원의원 20명은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의 귀국과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레이건 행정부가 압력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¹³⁾ 이에 류병현 주미 대사는 3월 29일 백악관 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레이건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답신을 보낼 것을 요청했고, 4월 5일에는 프랭크 의원을 면담하여 한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설명했다.¹⁴⁾

김대중은 3월 27일 「84년도 국정 소신」을 통해 발표하여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한국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와 같은 언론, 선거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는 독재자끼리의 정권교체에 불과”하며, 직선제 개헌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언론 기본법 폐기, 선거법의 제3공화국 수준으로의 개정, 노동관계법 개폐, 시위와 집시법

13) 「김대중 관계 서한(1984.3.15)」 한국외교문서 701-18770, 121-125).

14) 「김대중 관계 서한(1984.3.30)」 한국외교문서 701-18770, 128; 「김대중 관계 서한(1984.4.7)」 한국외교문서 701-18770, 139-140.

전면 개정 등 제도적 법적 조치에 의한 인권보장을 요구했다.¹⁵⁾ 또한 6월 21일 시카고트리뷴의 퍼스펙티브(Perspective) 난에 “Let’s back Korean Democrats”란 글을 게재하고, 미국 정부가 현 한국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한국 민주화세력에 대한 도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7월 16일부터 3일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여하여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 한국 민주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대중은 8월 22일 미 국무성 에이브람스(Abrams) 인권문제 담당차관보를 만나 귀국 의사를 전달하고, 미국의 관심을 요청했다.¹⁷⁾ 9월 11일에는 12월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두환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슬츠(George Shultz) 미 국무장관에게도 전달했다. 그는 귀국 이유로 하버드대학교 수학 및 신병치료 완료, 민주주의를 위한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 도래, 비폭력투쟁 및 온건주의 통합 촉진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¹⁸⁾ 그리고 9월 20일에는 워싱턴에서 하원의원 17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귀국 문제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¹⁹⁾ 또한 9월 10일 케네디 상원의원과 리치(J. Leach) 하원의

15) 「김대중의 소위 “84년도 국정소신” 발표내용(1984.4.19)」 한국외교문서 701-18770, 149-151.

16) 「기사 보고(1984.6.22)」 한국외교문서 701-18771, 3.

17) 「김대중 귀국 문제(1984.8.25)」 한국외교문서 701-18771, 139.

18) 「김대중의 국무장관 앞 서한(1984.9.12)」 한국외교문서 701-18772, 46. / 「김대중 귀국동향(1984.9.14)」 한국외교문서 701-18772, 85.

원 등 미국 의원들은 김대중의 안전 귀국과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두환에게 보냈다.

이렇게 미국 조야에서 김대중의 귀국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전두환 정권은 9월 21일 김대중이 귀국하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²⁰⁾ 또한 외무부 장관이 방미 중 케네디 상원의원과 솔라스 하원의원을 방문하여 남북 대치 상황과 한국의 자유화 조치를 설명하고 김대중이 귀국할 경우 재수감 등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려 계획했다.²¹⁾

그러나 마이쿨스키(Barbara Mikulski)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64명의 미 하원의원은 10월 16일자로 김대중 귀국 시 신변안전 및 그의 복권을 요망하는 대통령 앞 연서서한을 보내 전두환 정권을 압박했다. 이에 이원경 외무부 장관은 10월 UN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솔츠 국무장관, 밴스(Cyrus Vance) 전 국무장관, 홀부르크(Richard Holbrook) 전 국무성 아태 차관보, 솔라즈 하원의원, 풀러(Keith Fuller) AP 통신 사장 등을 만나 그가 귀국한다면 법에 따라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외교부 2015, 60). 그리고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남북분단의 제약하에서도 최대한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²²⁾

19) 「김대중의 귀국문제(1984.9.27)」 한국외교문서 701-18772, 169.

20) 「김대중 귀국 관련 정부 발표문(1984.9.21)」 한국외교문서 701-18772, 100-102.

21) 「미 의회 인사 접촉(1984.9.19)」 한국외교문서 701-18772, 86-99.

22) 「각하 지시 사항(1984.9.19)」 한국외교문서 701-18772, 87-88.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미국 내 김대중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케네디 상원의원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전두환 정권은 ‘케네디 상원의원에 대한 접촉순회활동 강화’(10.10) 계획을 세워 노력했지만 그와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하고 서신 왕래를 통해 상호 간의 인식 차만을 확인했다.²³⁾

결국 김대중의 귀국은 전두환 정권에게는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였다.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김대중이 귀국할 시, 잔여 형기를 내세워 투옥시키면 국내 지지 세력의 반발은 물론 국제여론과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반정부 조직에게 굴복한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1985년에도 1월 10일 약 130명의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서한 “Campaign to assure for safe return for KIM DAE JUNG” 제하의 안전 귀국 요청 서한이 전두환 정권에게 전달되는 등, 그의 안전 귀국은 계속 한미 정부의 쟁점이 되었다.²⁴⁾ 이때 전두환 정권은 귀국 후 그를 투옥시키는 것은 포기하고 2.12 총선 이후 귀국시키려 했다. 그래서 그에게 귀국을 총선 후로 연기한다면 그가 원하던 유럽 방문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²⁵⁾ 그러나 김대중은 이를 거부하고 19일에는 LA에서 교포들과 환송회를, 23일에는 미국 국무성에서 오픈 포럼을 가진 후,

23) 「김대중 동정(1984.10.5)」 한국외교문서 701-18773, 47-49.

24) 「김대중 동정(1985.1.14)」 한국외교문서 701-18754, 12.

25) 「김대중 귀국문제(1985.1.11)」 한국외교문서 701-18754, 9.

마침내 2.12 총선을 나흘 앞둔 2월 8일 한국으로 귀환했다. 전두환 정권은 국제적인 압력에 밀려 귀국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공언한 대로 다시 투옥시키지도 못한 채 가택연금 조치를 취했다.

한편 김대중은 미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국내의 민주화운동과 계속 관계를 지속했다. 1983년 초 재야인사들은 제2국민선언을 주도하고 김영삼 단식에 동참하는 동시에 양 김의 단합과 재야 정치인들의 결속을 촉구했다. 특히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는 1984년 5월 30일 8개 항의 합의를 만들어 국내의 김영삼 및 미국의 김대중을 접촉하여 협력관계 강화에 합의했다(김삼웅 2013, 112-113). 그 결과 5월 18일 김대중계와 김영삼계가 연합하여 민주화 투쟁 기구인 민주협을 발족했다. 비록 그가 미국에 있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사회의 민주화 운동 조직인 민주협의 한 축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상징성과 대중적 영향력이 여전한음을 보여준다.

결국 김대중은 미국에 거주하던 2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 학계, 종교계, 재미 교포, 그리고 언론과 접촉했다. 그는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과 20개 이상의 대학으로부터 초청받아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연설을 했고, 주요 언론은 물론 지역 방송국이나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의 실상을 알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김대중 2010, 428). 비록 이 시기 그의 활동이 국내의 민주화운동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미국에서 한국의 민주화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써 미국 내 한국 민주화 지지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그들이 레이건 정부에 압력을 넣어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3) 귀국 이후부터 6월 항쟁까지의 시기(1985.1~1987.6)

김대중의 귀국 문제가 한미 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던 1984년 11월 30일 전두환 정권은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피규제자 84명을 해금했다. 그러나 이때도 김영삼과 김대중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협에서는 선거 참여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맞섰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박형규 목사와 이돈명 변호사에게 정치활동이 가능한 정치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삼웅 2013, 120). 이에 대해 김상현은 그가 초기에 신당 창당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신민당 결성 후에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아 동교동 측근들의 출마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강원택 2015, 25). 결국 민주협은 민주화 투쟁을 위해 총선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12월 11일 김영삼·김대중 공동의장, 김상현 공동의장대행 명의로 새로운 정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민주협을 중심으로 비민주협 계열의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2·12 총선을 불과 25일 앞둔 1985년 1월 18일 창당 대회를 통해 신한민주당(신민당)이 탄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은 신민당의 선거 지원을 위해 2월 8일 귀국했다. 그런데 그의 안전 귀국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2년 전인 1983년 8월 21일 필리핀의 아퀴노 상원의원이 귀국

중 마르크스 정권에 의해 공항에서 살해당한 전례가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귀국하면 재수감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은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귀국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도와야 할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만일 한국이 민주화의 길에서 영원히 멀어져 버린다면 나의 전 생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하며 귀국을 강행했다(김삼웅 2013, 118). 김대중의 안전 귀국을 위해 미국 하원의원인 에드워드 페이건(Edward Feighan)와 토머스 포글리에타(Thomas M. Foglietta), 카터 행정부 시기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패트 데리언(Pat Derian)을 비롯하여 예비 해군대장, 목사, 다수의 인권운동가, 그리고 기자단 수십 명이 동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공항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환영 인파를 막았지만, 학생 500여 명은 이를 뚫고 “환영 김대중 선생 귀국” 등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공항 가도에는 학생과 시민 3만여 명이 “독재 타도”를 연호했다(김삼웅 2010b, 20-22).

귀국 직후 김대중은 격리되어 동교동 자택으로 호송된 후 통신수단이 단절된 채 가택 연금되었다. 그러나 총선 ‘현장’에서 그의 존재는 큰 이슈가 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야권 후보들은 김대중 및 김영삼과 맺은 이런 저런 인연을 선거 공보나 홍보물에 게재하여 이용했고, 이는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이용마 2015, 70). 그 결과 2.12 총선에서 창당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등극했다. 신민당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에서 전원 당선되면서 260석 중 67석을 획득하고 29.3%의 득표율을 획득했다. 여당인 민정당의 득표율이 35.25%인 것과 비교하면, 선거 결과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경고인 동시에 관제 야당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그래서 선거 직후 야당 통합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민한당 당선자들은 대부분 탈당하여 신민당에 입당했고, 그 결과 신민당은 103석의 거대 야당이 되었다.²⁶⁾

이에 전두환 정권은 3월 6일 정치활동 규제자 16명을 다시 해금시키면서 김영삼은 포함시키고 김대중은 제외했다. 이는 양 김을 분열시키려는 책략이었지만 양 김은 연대하여 계속 투쟁을 전개했다. 3월 15일 김대중, 김영삼, 김상현이 회동하여 양 김이 민주협 공동의장을, 김상현은 부의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민주협은 정통 야당세력을 대표하는 양 김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양 김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신민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이용마 2015, 71).

선거 승리 이후 민주협과 신민당은 계속 개헌논의를 제기했는데, 전두환 정권은 이를 무시하다가 1986년 1월 16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개헌논의를 1988년 올림픽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2월 김

26) 그런데 2·12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하는 데는 양 김과 신민당의 노력 이외에도 학생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지원 역시 큰 역할을 했다. 학생운동세력은 총선을 반(反)민정당 전선 형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신민당과 연대하여 총선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선거유세장에서 전두환 정권의 부패와 실정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한편, 신민당 후보가 전두환 정권을 공격할 때 박수와 환호로 힘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은 전두환 정권에 염증을 느낀 많은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신민당의 황색 돌풍과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234-235).

대중, 김영삼, 이민우 3인이 모여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월 11일 서울에서 시작된 개헌추진본부 결성대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김대중 2010, 464). 물론 김대중은 가택연금 당해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과 부산시 지부 결성대회에서 녹음 축사를 통해 1980년 4월 이래 처음으로 대중들과 만나게 되었다. 또한 3월 17일에는 두 공동의장과 문익환 민통련 의장, 박형규 한국 NCC위원, 이돈명 한국가톨릭정의평화위원장 등이 회동하여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를 결성하여 개헌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김삼웅 2013, 127). 곧 개헌서명운동을 매개로 신민당과 사회운동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5월 3일 신민당의 인천, 경기지부 개헌추진본부 결성대회에서 4,000여 명의 재야, 학생, 노동자들이 대회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폭력 시위가 전개되자 대회는 무산되었다. 이에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열어 "소수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비반미, 비폭력, 비용공 '3비(非) 원칙'을 재야와 운동권에 호소했다(김삼웅 2010b, 34-38; 장신기 2013, 194-197).

전두환 정권은 개헌투쟁의 열기를 누그러뜨리고 신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대를 와해시키기 위해 신민당의 개헌 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민정당은 국회에서 신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주장을 무시한 채 계속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결국 개헌 협상은 무산되었고, 신민당과 민주협은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공안사건을 이용하여 민주화운동을 강력히 탄압

하기 시작했다. 10월 14일 통일 국시발언을 빌미로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을 구속하고, 10월 28일에는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발대식을 위해 참석한 대학생들을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이면서 강경 진압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전두환 정권은 친위쿠데타를 의도했다(김삼웅 2013, 43). 곧 전두환 정권은 헌정 중단을 계획했고, 전두환은 “김대중이에게는 ‘군에서 죽이기로 했으니 정계은퇴하지 않으면 수감하겠다’고 경고하도록 보안사령관에게 지시했다”(박철언 2005, 235~238).

더욱이 금강산담 사건까지 터지면서 정국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김대중은 11월 5일 민주협에서 ‘시국수습을 위한 조건부 불출마를 결심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현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 직선제로의 개헌에 의한 조속한 민주화의 실현밖에 없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여기서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전두환 정권이 수락한다면 비록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김대중 2010, 466-467). 그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두환 정권의 친위쿠데타를 막고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김영삼도 난국 수습을 위한 고심과 충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자신도 김대중과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김삼웅 2010b, 47-49).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 김대중과 김영삼이 협력하자 전두환 정권은 양김을 따돌리고 야당 일부 세력과 내각제 개헌을 추진했다. 1986년 12월 24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언론자유 등 7개 항목을 전제로 내세우면서 의원내각제를 내세운 정부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

선제 개헌이라는 신민당의 당론에 어긋난 것으로, 이민우 총재가 독자적인 행보를 걸으려 했던 것이었다. 신민당 내부에서도 이철승을 비롯하여 비주류 의원 9명이 ‘이민우 구상’을 지지했지만 양 김은 단호히 거부했다. 김대중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없이 7개항만 이뤄지면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다. 직선제와 민주화 7개 항의 병행 투쟁은 백지화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대중 2010, 476). 결국 양 김은 내각제 지지자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고 결론내고 국회의원 74명과 함께 신민당을 탈당하여 1987년 4월 13일 통일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창당했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한 돌아가던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다. 취조받던 대학생을 물고문으로 사망시킨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다. 민주협은 ‘박종철 군 고문살인사건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2월 7일 국민추도회를 개최했다. 2월 13일 김대중, 김영삼 공동의장은 정부의 인권유린행위 중지, 내각제 개헌 강행 중지, 선택적 국민투표 실시, 두 의장과 전두환 대통령의 대화 촉구 등을 제안하는 ‘난국타개를 위한 제언과 우리의 결의’를 공포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양 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가택 연금시키고,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또는 개최되는 경우에는 최루탄을 터트리며 강경 진압했다.

특히 전두환은 민주당이 창당되던 4월 13일, 자신의 임기 중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개헌 논의는 1988년 올림픽 이후까지 중지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려던 전두환 정

권의 의도와 달리 국민들의 더 큰 반발을 가져왔다. 교수, 종교인, 변호사, 의사, 예술인, 교사, 영화인 등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일부 종교인들도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게다가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를 계기로 민주협, 민주당, 재야, 종교계 등은 민주헌법 쟁취와 대역 투쟁을 위한 공동기구를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5월 27일 ‘호헌철폐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결성했다. 국본은 민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6월 10일에 맞추어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호헌 철폐 민주 헌법 쟁취 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집회에는 전국 22개 도시 514곳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어 국본은 6월 9일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군을 추모하는 ‘최루탄 추방의 날’ 행사를 6월 18일 개최했는데, 전국에서 15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국본의 집회에는 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뿐 아니라 화이트칼라로 대변되는 중산층이 참여함으로써 정권에게 큰 타격을 가했다(강원택 2015, 36~37).

그런데 김대중은 4월 10일부터 6월 25일 새벽 0시까지, 곧 1987년 민주화 투쟁이 가장 뜨겁게 진행되던 시기에 78일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했다. 심지어 가족과 내외신 기자들의 출입까지 봉쇄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자택 부근으로 와서 ‘김대중 불법 감금을 즉각 해제하라’,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기습 시위를 전개했다. 전두환 정권은 도청을 하면서도 전화를 끊지 않았기에 김대중은 20여 개국 40여 개 언론

사와 전화로 인터뷰를 통해 민주화 투쟁을 지지했다(김대중 2010, 467-471). 그리고 김대중은 가택연금으로 현장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이협 비서가 전화로 현장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었고, 한화갑 비서는 외신 기자들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6월 25일 0시를 기해 78 일간의 연금이 풀리자 김대중은 4·13 호헌 조치 철회, 직선제 또는 선택적 국민투표 실시,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민주세력에게 어떤 폭력도 물리쳐 달라고 호소했다(김대중 2010, 483-486).

6월 26일 열린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은 전국에서 180만 명이 넘게 참가했고, 경찰은 시위대의 위세에 밀렸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결국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선제 개헌, 시국 사범 석방, 대통령선거법 개정, 국민기본법 신장, 언론 자유 창달, 지방 자치제 실시,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 8개 항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7월 9일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내렸다.

결국 1985년 2월 8일 김대중은 귀국 이후 진행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감한 귀국을 통해 2·12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하는 데 기여했고, 신민당의 광주항쟁 진상규명 요구와 직선제 개헌 투쟁을 막후에서 지원했다. 특히 1986년 11월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통해 전두환 정권의 친위쿠데타 명분을 약화시켰고, 야당 분열 공작에 맞서 김영삼과 함께 신민당을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을 결성했으며, 학생 및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함으로써

직선제 개헌투쟁이 성공하는 데 기여했다.

4) 6·29 이후 시기(1987.7~12)

6·29 직후부터 김대중은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가장 먼저 그는 여야의 개헌 협상에서 막후 역할을 담당했다. 개헌 협상은 야당이 주도했고, “8인 정치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야당은 김대중, 김영삼 씨에게 보고한 후 최종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이용희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양 김은 헌법 제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강원택 2015, 41). 다만 양 김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주장했지만, 양 김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우려한 민정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임혁백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결정된 것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3자 모두의 집권 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임혁백 2008, 11). 곧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도는 양 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6·29 선언 이후부터 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였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김대중이 8월 8일 민주당에 상임고문으로 입당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양 김의 입장은 팽팽히 대립했다. 김대중은 김영삼이 “김대중 씨가 사면 복권되면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겠다”는 말을 믿고 후보 단일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김대중 2010, 489). 그러나 김영삼계에서는 김대중에게 ‘불출마 선언’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 후보 조기 공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계는 불출마 선언은 전두환 정권이 자발적으로 직선제를 수락했을 경우 유효한 것인데, 4·13 호헌조치로 거부했으니 무효라는 논리를 전개했고, 대통령 후보 공천도 여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선거 직전에 하자고 주장했다. 또 김영삼계는 기존 대의원으로 전당대회를 열자고 한 데 비해, 김대중계는 민주화에 기여도가 큰 재야 민주인사들을 영입하여 범야 단일후보를 선출하자고 맞섰다(김삼용 2010b, 63).

양 김은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던 9월 14일 다시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김대중은 자신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내 최소한의 공정 경쟁의 틀과 꼴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36개 미창당 지구당 조직책 임명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영삼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김대중은 텔레비전 토론이나 전국 공동 유세를 하고 국민의 지지가 높은 사람이 후보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양 김은 9월 29일에도 만나 후보 단일화 담판을 가졌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김영삼에게 양보를 요구했지만 그는 김대중에 대한 군부의 비토를 내세우며 반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김대중 2010, 493). 그러나 김영삼은 자신에게 후보 양보를 권고했지만 김대중이 끝내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김영삼 2000, 103). 양자의 발언이 상이하지만 결국 양자 모두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10월 10일 김영삼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고, 김대중도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10월 22일 양 김은 다시 만났고 김영삼은 당내 경선을

제안했지만 김대중은 거부했다. 결국 김대중은 10월 30일 민주당을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이하 평민당)을 창당하고 제13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1983년 김영삼의 단식 투쟁을 계기로 다시 연대했던 양 김이 대통령을 눈앞에 두고 다시 결별했다. 이는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화를 원하던 많은 국민들의 소망을 짓밟은 것으로, 양 김 모두에게 패배를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군부 권위주의 세력인 노태우에게 대권을 넘겨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이행을 지체시킨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88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그리고 제1야당의 총재인 김대중이 군부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의 진전을 주도한 것을 고려한다면, 민주화 이행의 지체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화 세력이 기대했던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1980년대 민주화 이행에서 정치사회, 그리고 김대중이 수행했던 중요한 역할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는 없다.

3. 나가는 말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야당과 재야,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권위주의 군부정권에 대해 투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전두환 정권에게 민주화를 요구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간 중 군 동원에 반대했던 미국의 역할 또한 무

시할 수 없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민주화 이행에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했던 학생운동이 주축이 된 민주화운동 세력이다. 그러나 오직 그들의 투쟁으로만 민주화 이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이다. 다른 참여 세력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다른 세력들이 각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을 ‘온전히’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이 글은 민주화 이행에 참여했던 여러 세력 중 정치사회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던 김대중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물론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도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정치인이다. 비록 ‘서울의 봄’ 시기에는 김영삼과의 분열로 대중들을 실망시켰지만, 그가 받은 탄압은 김대중을 권위주의 통치에 의해 고통을 당한 ‘희생자’이자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 인식되도록 했다. 물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시작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좌경, 용공 이미지 덧씌우기는 그를 사상적으로 ‘불온한’ 인물로 인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김대중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는 물론 전두환 정권 시기에도 미국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미국으로 추방되는 데는 ‘진보적인’ 카터 행정부와 ‘보수적인’ 레이건 행정부의 힘이 작용했

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미국이 그에게 호의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그가 미국의 상식에 걸맞은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한국 민주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곧 미국은 김대중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이 권위주의 정권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들에게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공약을 입증해줄 수 있는 ‘본보기’였다.

그러면 김대중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는 김영삼의 단식투쟁 지지, 한국 민주화 촉구 성명서 발표, 1984년 민주협 결성 지원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대학과 연구소에서의 강연, 교포들과의 대화와 강연 등을 통해 레이건 정부의 전두환 정권 지원을 비판하고, 한국 민주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을 움직였고, 언론과 의원들이 레이건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만들었다. 1983년 10월 방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민주화 조치를 요구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그의 활동은 일정 정도 미국 정부의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활동은 미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두환 정권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 또는 변명을 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했던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결국 미국에서 김대중의 활동은 미국의 여론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미국 행정부의

대한 정책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85년 2월 귀국 후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직접 민주협과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세력 모두가 연합하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고, 미국과 중산층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참여세력 모두의 연합을 위해 노력했고 학생 및 사회운동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비용공, 비반미의 3비 원칙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세력들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두환 정권은 물론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결국 김대중의 의도대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세력이 참여하는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직선제 개헌 구호를 통해 중산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6월 민주항쟁은 승리했다. 비록 6·29 이후 정치사회의 분열로 민주화 세력이 집권에 실패했을지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정치사회와 김대중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평가절하될 수 없다.

참고문헌

강원택. 2015. “87년 체제와 민주화추진협의회.” 강원택 외. 『한국의 민주화와

- 민주화추진협의회』. 서울: 오름.
- 강원택 외.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서울: 오름.
- 글라이스틴, 윌리엄(William Gleysteen). 1999. 『알려지지 않은 역사』. 황정일 역. 서울: 중앙M&B.
- 김대중. 2010. 『김대중 자서전』 1. 서울: 삼인.
- 김삼웅. 2013. “민주화 투쟁과 민주화추진협의회.” 류상영·김삼웅·심지연 편저.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 _____. 2010a. 『김대중 평전』 1. 서울: 시대의창.
- _____. 2010b. 『김대중 평전』 2. 서울: 시대의창.
- 김영삼. 2000. 『김영삼 회고록』 3. 서울: 백산서당.
- 김호기. 1995.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1987~1992.” 김호기.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사회비평사.
- 류상영·김삼웅·심지연 편저. 2015.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서울: 연세대 출판문화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서울: 돌베개.
- 박철언. 2005.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 브라진스키, 그렉(Gregg Brazzinsky). 2011.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나중남 역. 서울: 책과함께.
- 성경룡. 1995. “한국정치 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임현진 외 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서울: 나남.
- 손호철. 1999.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서울: 푸른숲.
- 외교부. 201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84(1)』. 서울: 외교부.
- _____. 2014.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83』. 서울: 외교부.
- 윤상철. 199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이용마. 2015. “아당 정치와 민주화추진협의회.” 강원택 외.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
- 임혁백. 2008. “한국사회의 정치학적 고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발표논문(2008. 7.17).
- _____.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 장신기. 2013. “김대중의 민주화 이행전략.” 류상영·김삼웅·심지연 편저. 2015.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 전재호. 2014. “전환기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정일준 외.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 정의순. 1987. 『김대중 체미 775일』. 서울: 사초.
- 정일준 외. 2014.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4.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조현연. 1997. “한국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1980년에서 1987년까지.”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Dunlop, Thomas P. H. 1998. “Interview with Thomas P. H. Dunlop.” The Foreign Affairs Oral History Collection of the Association for Diplomatic Studies and Training.
- 한국의교문서 분류번호 701, 등록번호 18754.
- 한국의교문서 분류번호 701, 등록번호 18770-18774.
- 한국의교문서 분류번호 701, 등록번호 18782-18786.

Kim Dae-jung's Key Role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South Korea in 1980-1987

Jeon, Jaeho

Sogang Global Korea Initiativ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ole played by political society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in the 1980s has been underestima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Kim Dae-jung, one of the key players in this society. Throughout the 1980s, Kim Dae-jung was engaged in various kinds of domestic and overseas activitie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spite severe oppression of him by the authoritarian regime.

Through interviews and public lectures during his exile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1982, Kim Dae-jung criticized the Reagan Administration's backing of South Korea's military regime and appealed to the U.S. public for suppor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His activities enabled the U.S. media and members of Congress in favor of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to put pressure on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evidence shows that this pressure influenced the U.S.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policy of the Chun Doo-hwan regime toward the domestic democratization move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fter returning to Korea in February 1985, Kim Dae-jung, together with opposition party leader Kim Young-sam, led a nationwide fight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would proclaim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Furthermore, Kim Dae-jung realized that the succes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pended on a coalition of all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as well as support by the middle class in Korea and sympathetic allies in the U.S. As a result, while working to form such a coalition, he also criticized radical student and social movements and argued for the three principles of nonviolence, non-pro-Communism, and non-anti-Americanism.

In 1987, most of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med a coalition, the National Movement for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coalition attracted broad participation by the middle class, under the banner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ed to the historic victory of the June Democratization Struggle in that year. Although the democratic forces failed to take power immediately, the success of opposition parties in the general election in 1988 contributed greatly to further progress in democratization in Korea, reinforcing this article's thesis: that the political society and, in particular, Kim Dae-ju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in the 1980s.

■ **Keyword:** Democratization Process, Democratization Movement, Kim Dae-Jung, Reagan Administration, Political Society

투고 : 2016/9/27 심사 : 2016/10/11 확정 : 2016/11/15